수출기업·달러 자산 보유자 '방긋'… 소비자·수입업체 '한숨'

$고환율 뉴노멀 시대

❷ 경제주체 희비

환율 상승으로 기회-위기 오가
반도체·車·조선 등 환산매출 증가
항공업, 유류비 비용 부담 가중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돌면서 경제 주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기업과 달러 자산 보유자들은 환차익과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해외여행객과 유학생, 수입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같은 환율 상승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1539.4원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24영업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았다.

◆ 수출기업, 환차익 기대감

원·달러 환율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자는 수출기업이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예컨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달러로 팔고 원화로 실적을 집계한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달러 매출이 원화 기준으로 15.4% 더 커진다. 반도체 한 개 수출가격이 달러로 동일해도 원화 영업이익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업계는 해외 판매가 달러로 거래되고 실적이 원화로 집계되는 구조로, 환율이 오르면 환산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6 한 대를 4만 달러에 팔면, 1300원 환율 기준 원화 환산액은 5200만원이지만 1500원 환율이면 6000만원이 된다. 조선업도 수혜군이다. 선박은 수주 시점에 달러로 계약하고 몇 년 뒤 실제로 인도하는 구조여서, 계약 당시보다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 환산 매출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

달러 예금이나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환율 상승의 수혜를 입는다. 같은 달러 자산이라도 원화로 환산한 평가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여부와 별개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해외여행·유학·원자재 비용 부담 가중

반면 항공업은 고환율의 최대 피해 업종 가운데 하나다.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유류비 등 주요 비용을 달러로 지급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710억원의 비용 압박이 생기며, 1500원 수준에서는 비용 증가분이 5000억원대로 확대된다. 항공업계 전반을 합산하면 1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권 운임과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으로, 항공유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고, 유가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최대 33단계까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7월 한국 출발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 책정 기준으로 6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 (MOPS) 25단계 대비 8단계 낮춘 19단계를 적용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항공권과 호텔, 식비 등 대부분의 해외여행 경비가 달러 또는 현지 통화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환율 상승분이 고스란히 여행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학생 역시 등록금과 생활비 송금 부담이 커진다. 미국 대학에 연간 3만달러의 학비를 내는 경우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부담액은 39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약 600만원 늘어난다.

수입업체들도 비상이다. 원유와 곡물,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는 만큼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가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나 수익성 악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과 달러 자산 보유자에게는 호재지만 수입업체와 해외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환율이 15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업종별·계층별 체감 경기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강력 촉구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 위협받아"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시간당 1만32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곳도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8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반도체 호조와 대기업 실적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계속되는 내수 부진,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그리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빚 때문에 걱정 속에 잠 못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이고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며 "이는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을 무작정 인상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처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당장 줄 돈이 없어 내보내야만 하는 심정을 대체 누가 알아주겠냐"고 되물었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77.6%에 달했다. 비수도권(81.5%)이 수도권(74.2%)에 비해 7.3%포인트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은 올해 대비 '동결(41.6%)'하거나 '인하(21.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감내 수준 이상일 경우 1순위 대응책은 '신규 채용 축소'(24.6%)였다.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동결·삭감(22.0%)'을 택한다는 곳도 있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당국,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보호 나서

단일종목 변동성 커지며 제도 보완 방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자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변동성 위험을 점검하며 추가 안전장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04% 뛴 94.81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당국은 진입 요건을 강화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품의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이나 신규 상품 상장 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의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말 해외 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후 당국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 유의를 당부해왔다.

그러나 이 원장이 최근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최근 높은 회전율과 과도한 매매를 문제 삼자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이 생긴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재경부 "기업효율성·인프라 개선 이어갈 것"

정부가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 부문 개선세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효율성 등 부진한 부문의 경우, 개선책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제1 차관 주재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을 점검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순위 상승을 견인한 기업효율성·인프라 분야의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효율성 등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